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0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3.

발 의 자 : 이성권 · 김용태 · 이현승
신성범 · 김 건 · 이달희
조은희 · 안상훈 · 김도읍
조승환 · 우재준 · 배준영
강명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(드론)를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 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·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해·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, 이를 위해 산 및 급경사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무인비행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순찰·감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·재난 등의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무

인비행장치가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31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1조의2제2항 중 “등으로 인한”을 “등의 예방 활동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) ① (생략)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·재난 <u>등으로 인한</u> 수색 ·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 후송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히 비행(훈련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 련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제 129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(생략)	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등의 예방 활동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③ (현행과 같음)